

MOST	보도자료 □□□□□□□□□□□□		보도시점	'05. 6. 1(수) 조간부터		
			자료배포일	'05. 5. 31	매수	총 7매
과학기술부	담당 담당	연구개발조정관실	과장	정기준	02) 2110-3740	
정책홍보 담당관실		연구개발예산 담당관실	주무관	김영수	02) 2110-3744	

과학기술혁신본부, 새로운 국가R&D예산 조정·배분시스템 본격 운영

- 평가결과, 전문분야 검토, 06년 사업계획을 연계 종합 심의·조정 -

▶ R&D투자 효율성 제고로 국민소득 2만불시대 진입을 견인 ◀

- 과학기술혁신본부(본부장 任祥奎)는 과학기술혁신과 성장동력 확충을 통해 국민소득 2만불시대 진입을 견인하고 혁신주도형 선진경제사회 도약과 과학기술중심사회 건설을 선도하기 위해
 - 혁신본부 출범과 함께 새롭게 구축해온 국가연구개발예산의 조정·배분 시스템을 정부 각 부처가 내년도 예산요구서를 제출하는 5월말부터 본격 가동
- 국가R&D예산의 조정·배분은 지난해 10월에 이루어진 과학기술부장관의 부총리 격상과 과학기술혁신본부의 신설로 구체화된 새로운 과학기술행정체제의 핵심적인 기능으로서
 -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18개 중앙부처(11개부 7개청)의 300여개에 달하는 연구개발사업을 대상으로 전략성·전문성·효율성에 입각하여 예산을 배분함으로써 국가혁신체제의 효율성 제고와 투자성과의 극대화를 목표로 함

□ 이를 추진하게 된 배경은

- 그동안 과학기술혁신을 통한 국가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R&D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하여
 - 정부투자규모가 ('95) 1.8조원 → ('05) 7.8조원으로 최근 10년간 4배 이상으로 증가
 - R&D투자의 GDP비중은 2.64%('03)로 세계 8위 수준('05 IMD 연감)
- R&D투자가 양적으로는 확대되었으나 국가 차원의 기획·조정 및 성과평가기능의 미흡으로 투자의 효율성에 의문 제기
 - 전략적 자원배분을 통한 국가기술혁신체제(NIS)의 효율성 제고 요청
- 이에 따라 작년 정부조직법과 과학기술기본법을 개정하여 국가 과학기술위원회(위원장: 대통령)에 R&D예산의 조정·배분기능을 부여하고, 이를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실무기구로서 「과학기술 혁신본부」를 설치

□ 새로운 R&D예산 조정·배분 체제의 특징은

< 국과위의 예산 조정·배분권 및 예산처와의 역할분담 >

- 과학기술기본법 제9조에 근거하여 국과위(혁신본부)는 R&D 예산을 심의하여 조정·배분 하고, 동법 제21조에 따라 예산처는 국과위의 조정·배분결과를 예산편성에 반영

< 계획과 예산의 연계 강화 >

- 국가발전목표 및 투자방향에 따라 R&D예산을 전략적으로 조정·배분
 - 과학기술기본계획, NIS 추진계획 등 중장기계획을 반영하여 R&D분야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 및 중점투자방향 제시

〈 공정성·전문성을 겸비한 상시 검토체제 구축 〉

- 국가 R&D사업 예산조정·배분의 전문성·효율성·공정성을 겸비한 R&D예산 상시 검토체제를 구축
 - 혁신본부에 기술분야별로 4개 심의관실을 설치하고 민간 전문가들로 8개 전문위원회를 구성·운영
- ※ R&D사업의 성과평가를 담당하는 9개 평가소위원회는 별도로 운영

〈 성과평가 결과를 예산조정에 직접 반영 〉

-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평가결과를 예산조정·배분에 최대한 반영
 - 성과 극대화를 촉진하는 평가지표를 개발하여 사업개선을 촉진하고 중복·연계사업 조정을 통한 과잉투자 해소

□ 지금까지의 주요 추진현황은

- 각 부처의 R&D 분야 중기 ('05~'09년) 사업계획서 제출 ('05.1.31)
- 「'06년 국가 R&D 예산조정·배분 추진계획」 수립·통보(2.22)
 - '05~'09년 R&D부문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과 연계하여 추진(예산처와 공동으로 작업추진, 1~8월)
- 4개 심의관실을 중심으로 기술분야별 8개 전문위원회 구성 (2월말)
- R&D분야 중기재정 사업계획 및 예산의 심의·조정(2~3월)
- '06년도 국가연구개발 중점투자방향을 수립하여 예산처 및 관계부처에 통보(3월중)
- R&D 예산규모(안) 및 부처별 R&D 지출한도(안)을 예산처에 제시
 - 국과위 기획예산조정전문위원회를 개최하여 관계부처의 의견을 수렴, '06년 R&D지출한도(안) 마련(3월말)

- 예산처는 혁신본부(안)을 반영한 부처별 지출한도를 각 부처에 통보(5월초)
- ※ 국가재원배분 국무위원 토론회 개최(4.30~5.1)

【'06년도 R&D예산 지출한도】

- R&D예산 규모 : 8조4,815억원('05년 7조7,996억원 대비 8.7%증)
- 예산(일반+특별) : 7조 80억원
- 기금 : 1조4,735억원
- ※ 국가재정운영계획('05~'09) 시안에 R&D분야 평균증가율(9.1%)이 통합재정규모 평균증가율(6.6%)을 상회하여 반영

□ '06년도 R&D예산 중점투자방향은

① 신성장동력 확충

- ▶ 10대 차세대 성장동력산업, 대형 국가연구개발 실용화사업, 21세기 프론티어 연구개발사업 등 지원
- ▶ 중소·벤처기업의 혁신역량강화 지원

② 기초·원천기술개발 및 연구인력 질적 제고

- ▶ 기초·원천연구에 대해 지속적 투자 확대
 - * 정부 R&D 예산대비 기초연구비 비중 : 21.5%('05) → 25%('07)
- ▶ 수요지향적 핵심연구인력 양성 지원

③ 지역혁신 역량 강화

- ▶ 지방 연구개발 투자비중 확대
 - * 정부 R&D 예산대비 지방투자비 비중 : 33.7%('05) → 40%('07)
- ▶ 지방대학 육성 및 권역별 특성화 발전 지원

④ 출연(연) 활성화

- ▶ 안정적 연구환경 조성을 위한 기본사업비 단계적 확대지원
- ▶ 전문 연구기능 강화 지원

⑤ 국가 잠재력 제고 및 삶의 질 향상

- ▶ 우주·항공 기술자립 기반확충 지원
- ▶ 첨단 국방기술 개발을 위해 국방예산중 R&D 비중 확대
- ▶ 에너지·환경·해양분야 투자기조 유지

⑥ 연구기반 확충 및 과학기술 저변 확대

- ▶ 대형 국가 연구시설·장비의 확충 지원
- ▶ 과학기술 문화활동 지원
- ▶ 해외협력을 통한 과학기술 글로벌화 지원

□ '06년도 R&D예산 조정 기본방향은

- 선택과 집중의 원칙에 따라 '06년도 국가연구개발 투자방향에 따른 전략적 투자부문에 지원을 강화
- 민간투자가 활발한 분야 및 기존에 집중적으로 투자된 분야의 사업은 조정에 의하여 선별적으로 투자
- 대형 연구개발사업 및 주요 현안사업에 대해서는 전문가 집중 검토를 통해 사업성과 극대화 관점에서 조정
- '04년도 조사·분석·평가 결과 및 성과결과를 반영하고 과잉·중복투자의 경우 사업간 조정·연계 추진
- 다부처 관련사업은 공동기획·관리체제 구축으로 시너지 창출 유도

○ R&D 투자규모에 따라 규모가 큰 부처는 부처 기능 및 효율성의 관점에서 조정하고,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은 부처는 R&D부문 동반성장 취지하에 선택적으로 투자를 확대

※ '05년의 경우 과기·산자·국방·교육·정통부 등 5개 부처가 정부 총R&D예산의 80% 차지

□ 앞으로의 주요 추진일정은

○ 각 부처 예산요구서 접수(5월말)

○ 혁신본부 예산검토(6~7월)

- 8개 전문위원회 운영, 부처별·분야별 중점검토 및 심의

○ '06년 예산조정·배분(안) 국과위 심의·확정(7월말)

※ R&D분야 국가재정운용계획(안) 수립과 연계

○ '06년 예산(안) 및 국가재정운영계획(안) 확정 및 국회제출(10월)

새로운 과학기술행정체계에 따라 혁신본부가 수행하는 R&D 예산 조정·배분은 전 세계에 유례가 없는 참여정부의 대표적인 정책 혁신사례로서, 혁신본부는 전문성·공정성·투명성의 원칙하에 이를 반드시 성공시켜 국민소득 2만불시대 진입의 견인차 역할 담당

※ 문의 : 연구개발예산담당관실 김영수 주무관(02-2110-3744)

【붙임】

【연구개발예산 조정·배분절차】

1월	▪ 각 부처는 주요사업계획과 신규사업 관련 계획서를 1월말까지 기획예산처와 국과위에 제출
2월	▪ 특히, 100억이상 신규사업은 기획연구보고서 제출(2월말)
3 ~ 4월	▪ 국과위 1차 조정·배분 - R&D 총규모, 부처별 지출한도에 관한 조정배분안 마련
5월초	▪ 기획예산처는 지출한도를 각부처에 통보 - 국과위 의견을 감안, 총규모, 부처별 지출한도를 통보 ▪ 국과위는 균특 R&D 예산총액(안)을 균형위에 제시
5월말	▪ 각 부처는 지출한도내에서 자율편성 및 예산요구 - R&D예산요구서를 기획예산처와 국과위에 동시 제출
6월	▪ 국과위 R&D 사업 예산 조정·배분 - 개별 사업별로 예산규모 조정 - R&D 총규모내 부처간 지출한도 조정가능 - 균특R&D는 균형위 의견 수렴
7월	※ 심의대상 : 원칙적으로 쫑 R&D 대상 (제외 : 인문경제분야 연구개발, 각 부처 정책연구비) ※ 국과위는 조정·배분결과를 7월31일까지 기획예산처 제출
8-9월	▪ 기획예산처는 국과위 조정배분결과를 반영, 최종 정부안 마련